

한동훈 대표 100일... 불안정 당정 관계·당내 리더십 '난제'

친한 "국힘 변화·쇄신 노력" vs 친윤 "분열·갈등 초래" 평가 분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정치력 시험대...오늘 취임 100일 인터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후 100일 동안 '변화와 쇄신'을 앞세워 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 대표는 4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100일 만에 당 대표에 선출되며 정치 전면에 복귀했고, 이후 100일 동안 '여당 내 야당' 노선을 걸으며 대통령실과 차별화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그의 '변화와 쇄신' 행보는 여론 위기의 한가운데서 야권의 대대적 공세에 맞닥뜨린 김건희 여사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안팎 '김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및 의혹 해소 노력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이 즉각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자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 대표의 차별화 시도는 당정 지지율 하락의 악조건에서도 지난 16일 재·보궐선거에서 '땀방' 입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를 지켜내면서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게 친한(친한동훈)계의 시각이다. 특히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금정에서 22.07%포인트(p) 차의 압승을 거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 대표의 100일 행보에 대한 당내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29일 SBS 라디오에서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100일 동안 밀 작업을 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용산과 차별화한다고 했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당정 지지율 반등이 전혀 없다"며

서 "차별화가 아니라 오히려 당내 갈등과 분열만 초래해 당정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상반된 평가 등으로 한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아직 탄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를 혹평하는 쪽에선 그가 원의 대표로서 원내 장악력이 약한 데다, 당의 주류인 영남권·중진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는 한 대표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계기이자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대치하는 가운데, 한 대표는 친윤 성향의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의견 충돌을 빚은 바 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좌초된다면 한 대표는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오히려 당내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강해져 한 대표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맞서 대야(對野) 투쟁을 이끌어야 하는 것도 한 대표의 과제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김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30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강약약 보수'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보수), '외연 확장 등을 키워드로 변화와 쇄신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강강약약은 기득권에는 강하게 대응해 쇄신을 끌어내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일시 | 2024.10.29 (화) 13:00 장소 | 국회 본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캠프-명태균 희대의 사기극, 특검 외 탈출구 없다"

민주 원내대책회의... "명, 수사하면 감옥행...국회서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희대의 사기극이라도 적당한 것인가"라며 "대놓고 여론조작, 노골적 공천 개입, 최순실 뺑치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명태균을 버렸다. 이대로 윤석열 정권의

수사가 진행되면 명태균 혼자 다 뒤집어쓰고 혼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명씨는 국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삼국지를 보면 조조는 자신의 오랜 책사인 손오공에게 빈 도시락을 보내면서 절연하게 된다. 지금 명씨는 김 여사에게 빈 도시락을 받은 것과 같다"며 "용산 대통령실에 숨어 있는 김 여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나"라고 명씨의 국회 국감장 출석을 거듭 압박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장에 인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모두 여당발 의혹인 만큼 그 폭로의 신빙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미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외치고 있다"며 "김 여사의 국정농단 실체가 충분히 드러난 이상 이제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의원은 "국정 논란과 국기 문란은 정역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으로 점철된 권력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탄핵은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만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기간 3년 연장

야권 주도 교육위 법안소위 의결...국힘, 처리 반발 불참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법률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 특례 효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생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위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방시대 실현, 분권형 경영체제 전환을"

박준형 시도지사협회장 간담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준형(부산시장) 회장은 29일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신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협의회장 취임 후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고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가 중앙-지방 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평하며, 지난 7월 개최된 제7회 중지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시의성 높은 주요 안전에 대한 제

도개선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안건도 회의현장에서 토의절차를 통해 국가정책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제8회 중지협에서도 저출생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빈집 및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을 보고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지난 9월에는 협의회 최초로 '시도지사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